

제5호(2011.12.27)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 동 원 박 혜 진

1. 조사개요	3
2.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	4
3. 농업·농촌 정책의 평가	10
4.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	13
5. 주거환경과 복지대책에 대한 의견	16
6. 시사점	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용 문의: **김동원** 부연구위원 02-3299-4227 dongweon@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 약 ◇

도시민 90.2%는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응답하여 5년 전보다 농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소폭(1.8%p) 상승하였고, 도시민과 농업인 대다수가(각 75.2%, 75.9%) ‘농업이 잘못되면 국가경제가 잘못될 것’이라고 우려한 가운데, 전문가 92.9%는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농업·농촌에 대한 높은 지지도가 유지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향후 식량공급 사정에 대해서는 대부분(도시민 71.0%, 농업인 82.5%, 전문가 92.9%)이 불안하다고 전망하였으며, 도시민의 57.8%와 농업인의 42.2%가 농업을 쇠퇴산업이라고 꼽은 반면, 전문가는 59.5%가 성장산업이라는 견해를 보여 인식의 차이가 나타남.

올해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성과가 있는 정책으로 농업인은 ‘가축질병 대응강화’(55.6%)를, 전문가는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50.0%)를 꼽았음. 농업개방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도시민(44.4%)과 농업인(59.7%), 전문가(45.2%) 모두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시 우리 농산물을 비싸더라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도시민 비율이 전년보다 6.0%p 하락한 39.1%로 조사되어 우리 농산물구매 충성도가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었음.

2012년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으로는 FTA 등 농업개방 대응을 꼽았고, 농산물값 안정대책이 다음 순으로 제시됨. 도시민은 가장 관심있는 정책으로 최근 3년 연속 ‘안전한 식품 공급’을 꼽았음.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은 63.7%로 전년보다 16.0%p 증가하였으나, 귀농·귀촌 의향을 가진 도시민 중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58.7%에 달해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귀농 지원에 찬성하는 농업인과 전문가는 각 57.3%, 78.6%로 긍정적이었음.

현 거주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은 농업인이 39.5%로 도시민의 43.0%보다 다소 낮게 조사되었으나 격차가 크게 줄었고, 노후대책에서는 농업인 14.1%가 ‘아무 대책이 없다’고 응답해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1. 조사개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 파악과 정책 평가, 그리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할 목적으로 매년 하반기에 대국민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¹⁾

금년 조사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도시민과 농업인, 전문가 그룹 등 국민 3천8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도시민 1,500명, 농업인 754명, 전문가 42명이 참여한 유효 조사표 2,296건을 확보하여 분석함

조사내용은 농업·농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식,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기대, 농업개방과 대책에 대한 견해, 식품안전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 등이며, 이 자료에서는 조사 내용의 주요 결과만을 정리함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 도시민(면접 1,500명): 전국 도시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 할당 표본추출, 1:1 방문 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pm 2.5\%p$ >
- 농업인(응답자 754명): 당 연구원 전국 현지통신원 1,999명 대상 우편조사
<당 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은 연구활용 목적으로 구성된 농가로, 각 특성별 분포는 농촌사회 평균 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있음에 유의>
- 전문가(응답자 42명): 농업계 및 비농업계 학자와 연구자 351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42명)의 64.3%가 농업계 전문가로 분류

1) 이 조사는 1978년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다가 2006년부터 도시민을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식조사로 확대하였고, 2009년 전문가 그룹을 추가하였음. 연구활용이라는 조사목적에 부합하고 과거 조사연계 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 여론조사와 패널조사를 병행함.

2.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

□ 도시민 10명 중 9명 “국가경제에서 농업·농촌 중요”

- 도시민 90.2%와 농업인 81.3%가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 또는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요할 것’ 이라고 인식
 - 이같은 중요성 인식은 2006년 조사결과(각 88.4%, 72.1%)보다 높은 수치

그림 1. 국가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도시민과 농업인 10명 중 7명(각 75.2%, 75.9%) 정도는 농업이 잘못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잘못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는 거의 대부분이(92.9%) 이에 동의
- 한편으로, 도시민 중 농업정책 또는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39.6%에 그쳤으며, 농업정책 또는 농업문제가 자신과 관련이 많은 응답은 51.7%
 - 농업의 실상과 농촌문제를 잘 안다는 응답도 33.4%에 그쳐 대체로 중요성 인식보다 관심도는 낮은 수준

□ 농업인 78.5%가 “농업·농촌 투자 늘려야”, 39.5%가 “농업은 성장산업”으로 인식

-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도시민(73.7%)과 농업인(78.5%)이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가 그룹은 대부분(92.9%)이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인식

그림 2. 농업·농촌 투자에 대한 견해



- 우리나라 농업이 ‘성장산업’이라는데 동의한 도시민은 26.8%, 농업인은 39.5%로 나타났고, ‘쇠퇴산업’이라고 인식하는 도시민은 57.8%, 농업인은 42.2%로 나타남
 - 전문가 그룹은 과반수 이상(59.5%)이 농업을 ‘성장산업’이라고 인식해 농업의 가능성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농업 상황이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 ‘좋아졌다’고 응답한 농업인은 44.7%인 반면, 전문가는 33.3%로 나타나 농업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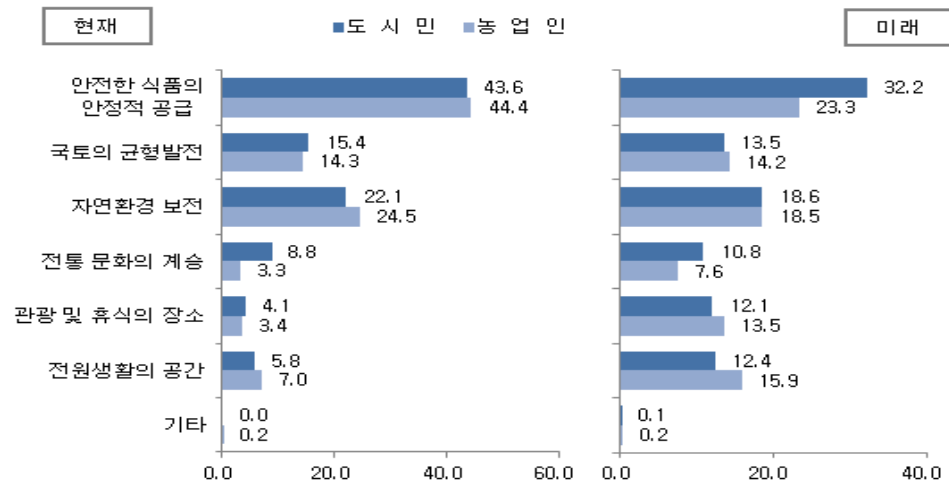
□ 현재와 미래 농업·농촌의 역할로 ‘안정적 식품 공급’ 꼽아

- 현재와 미래의 농업·농촌 역할에 대한 견해는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현재(도시민 43.6%, 농업인 44.4%)나 미래(도시민 32.2%, 농업인 23.3%)

모두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꼽았음

- 미래에는 ‘관광 및 휴식의 장소’, ‘전원 생활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현재보다 2-3배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그림 3. 현재와 미래의 농업·농촌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식



- 도시민은 농촌이미지에 대해 ‘인정이 풍부하고 전통적인 풍속이 남아있는 곳’(30.7%),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되고 휴양에 도움이 되는 곳’(22.4%), ‘도시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14.1%), ‘조용하고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곳’(13.9%) 등의 순으로 응답

- 농업·농촌관련 다양한 인식조사에서 ‘초·중·고 교과과정에 농업·농촌체험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에 도시민 92.9%가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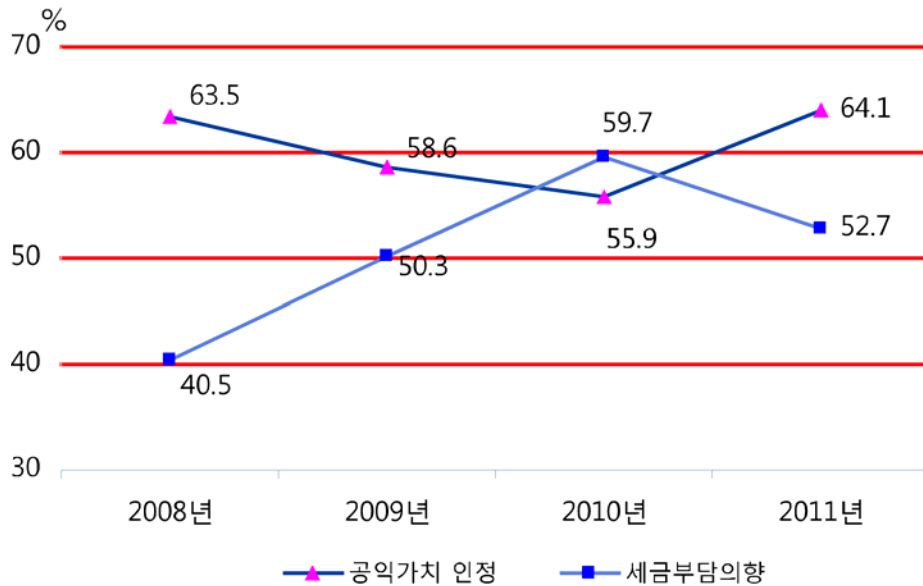
- 반면,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18.4%에 그쳐 긍정적인 인식이 우세

□ 도시민의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인정 비율은 전년보다 8.2%p 상승

- 농업·농촌의 기능 중 먹거리 생산 외에 자연과 전통보존, 휴식장소 제공 등을 의미하는 사회·문화적 공익적 기능에 대해 이를 인정한다는 도시민은 2010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다가 올해 64.1%로 8.2%p 상승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에 대해서는 도시민 52.7%가 찬성하여 전년 대비 7.0%p 감소해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던 지지율이 하락세로 반전

그림 4. 도시민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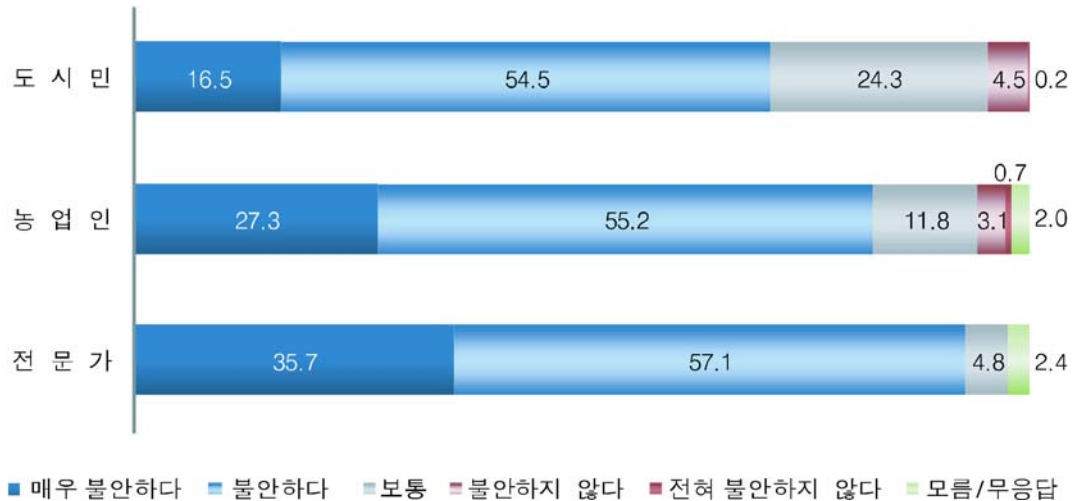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중요도 인식에 대해 대부분의 도시민은 ‘식량안보 기능’(95.1%)이 가장 중요하다(매우 포함)고 꼽았으며, 다음으로 ‘환경 및 생태계 보전’(91.8%)을 중요한 기능으로 꼽음

□ 10년 후 한국농업 ‘희망적’ 20%대로 하락, 곡물수급 ‘불안’ 인식

- 향후 10년 후 한국농업 미래에 대해 ‘희망적’(매우 포함)이라는 응답은 전문가 28.6%, 도시민 24.2%, 농업인 22.1%로 집계되어 전년보다 각 13.6%p, 5.7%p, 3.3%p 하락
 - ‘비관적’(매우 포함)이라는 응답은 농업인 50.3%, 도시민 33.7%, 전문가 33.4%로 농업인의 경우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의 2배에 달함

- 앞으로 우리나라 식량공급 사정에 대한 전망은 ‘불안하다’(매우 포함)는 응답이 전문가 92.8%, 농업인 82.5%, 도시민 71.0%로 집계되어 전문가 그룹의 우려가 더 큰 것으로 파악

그림 5. 앞으로 우리나라 식량수급 사정에 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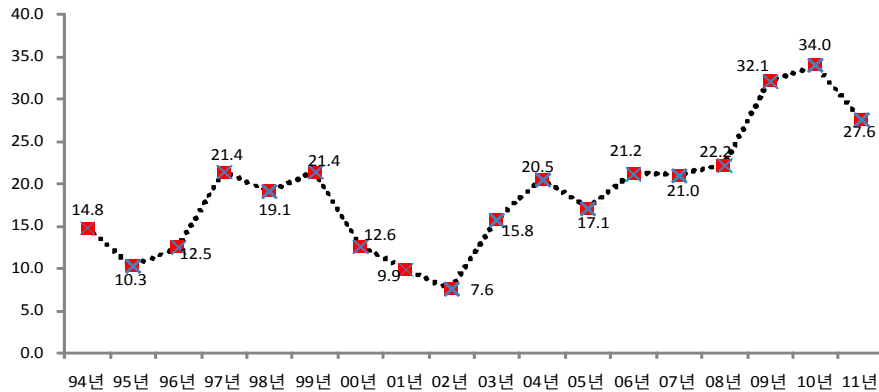
□ 농업인 직업만족도 하락, ‘개방에 따른 장래 불안감’ 확산

-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농업인의 직업만족도는 2010년 34.0%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이번 조사에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 27.5%로 나타남²⁾
- 만족 요인으로는 ‘정년없이 일할 수 있다’(49.0%), ‘좋은 자연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20.2%), ‘도시근로자에 비해 스트레스가 적다’(11.5%) 등으로 직업 환경이 농업인의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 불만족 이유로는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32.9%),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불안’(30.2%),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16.3%), ‘육체적으로 힘들’(11.5%) 등으로 나타남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매년 말 실시하는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 농업인의 직업만족도 측정 항목을 포함하여 연도별로 변화를 파악하고 있음.

- 불만족 요인 중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불안’을 꼽은 비율이 전년보다 2배 정도(15.4%p)나 증가

그림 6. 농업인 직업만족도 변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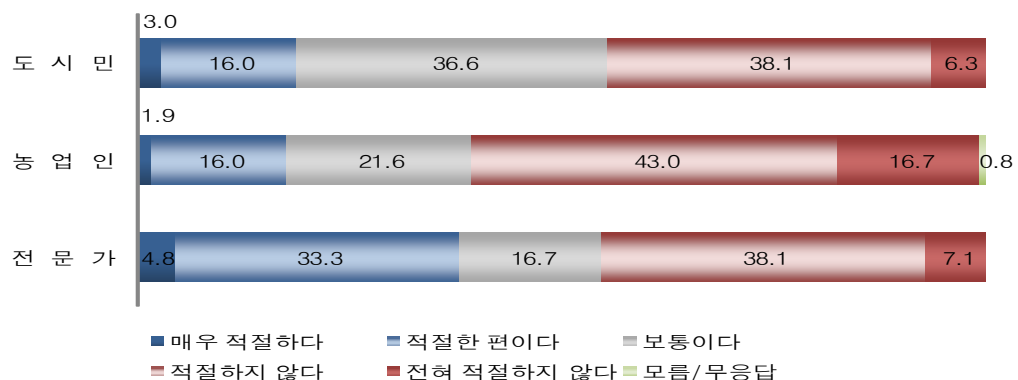
- 농업인들의 올해 농사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해(14.3%)보다 10.8%p 높아진 25.1%를 기록함으로써 10명 중 4명 정도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 5년 전과 비교한 올해의 농촌생활 수준은 ‘좋아졌다’는 응답이 27.3%, ‘나빠졌다’는 응답이 31.3%로 나타났으며, 5년 후의 생활수준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14.5%)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에 비해, ‘현재보다 악화될 것’(40.3%) 이라고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높았음
 - 농업인 70.0%는 ‘도시에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여 농촌생활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

3. 농업·농촌 정책의 평가

□ 농업개방 대책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전문가 인식에 큰 차이

- 올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농업정책과제 11개에 대해 농업인들은 ‘가축질병 대응 강화’(55.6%) 등 7개 과제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그 중 ‘가축질병 대응강화’ 분야는 55.6%가 ‘성과 있다’, 13.3%가 ‘성과 없다’고 응답하여 가장 성과 있는 분야로 평가 - 전문가들은 ‘쌀 수급안정 및 가공산업 발전’(38.1%) 등 3개 과제에 대해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여 농업인보다 상대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분야가 적었음
- 농업·농촌·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정부가 얼마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매우 포함)는 응답이 도시민 10.4%, 농업인 6.2%, 전문가 2.4%로 집계되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우세
- 정부가 농업을 개방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보상과 경쟁력 제고 노력 등 적절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절하다’(매우 포함)는 응답이 전문가 38.1%, 도시민 19.0%, 농업인 17.9% 순으로 조사되어 농업인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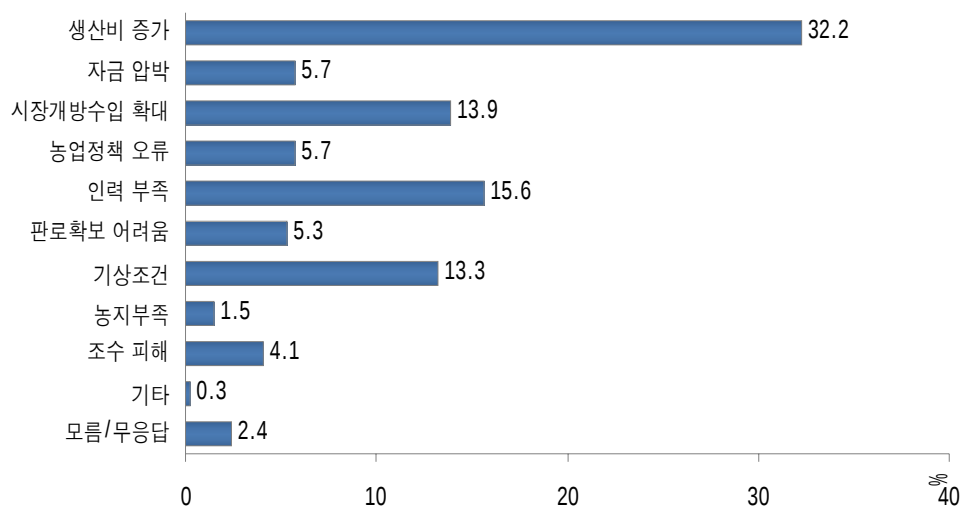
그림 7. 국내농업 개방에 따른 정부 대책에 대한 견해



□ 농가경영 위협요인으로 ‘생산비 증가’ 꼽아

-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경영의 위협요인을 파악한 결과 ‘생산비 증가’가 32.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인력 부족’(15.6%), ‘시장개방 수입 확대’(13.9%), ‘기상조건’(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 조사결과보다 ‘생산비 증가’ 3.6%p, ‘시장개방 수입 확대’ 0.9%p, ‘기상조건’ 1.0%p가 각각 증가하였고, ‘판로확보 어려움’ 4.3%p, ‘인력 부족’은 1.0%p 감소
 - 전문가는 농가경영의 위협요인으로, ‘생산비 증가’가 28.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시장개방 수입 확대’(25.6%), ‘인력 부족’(16.7%), ‘판로확보 어려움’(12.8%) 등의 순으로 응답해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위협을 농업인보다 11.7%p나 높게 인식

그림 8. 농업인들이 느끼는 농가경영 위협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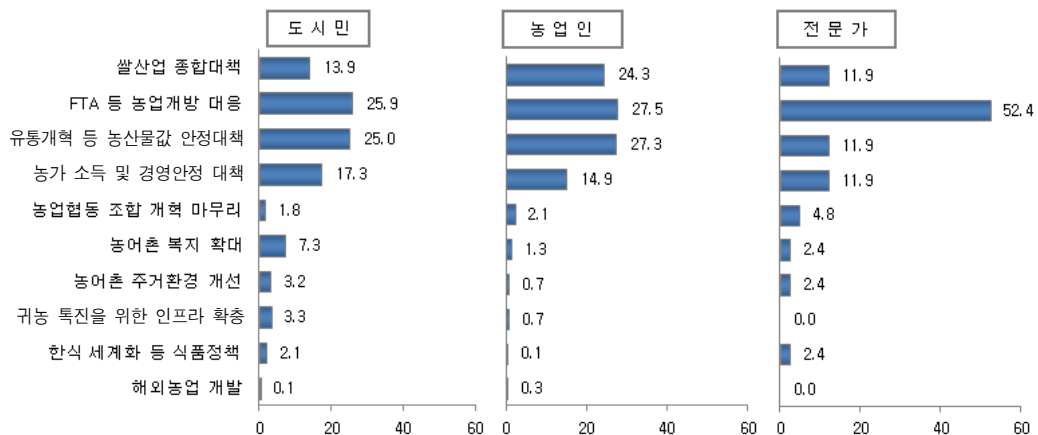


- 올해 이상기후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는 농업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1.0%에 달했으며, 이 중 27.2%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
 - 이상기후에 대비한 대응책에 대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2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사 방식 전환(노지 → 하우스 등)’(21.9%), ‘작목 전환’(1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내년도 중점 농정 분야로 ‘농업개방 대응’, ‘농산물값 안정’ 꼽아

- 내년도(2012년)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 분야로 도시민, 농업인, 전문가 모두 ‘FTA 등 농업개방 대응’(각 25.9%, 27.5%, 52.4%)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유통개혁 등 농산물값 안정대책’(각 25.0%, 27.3%, 11.9%)이라고 응답

그림 9. 내년도(2012년)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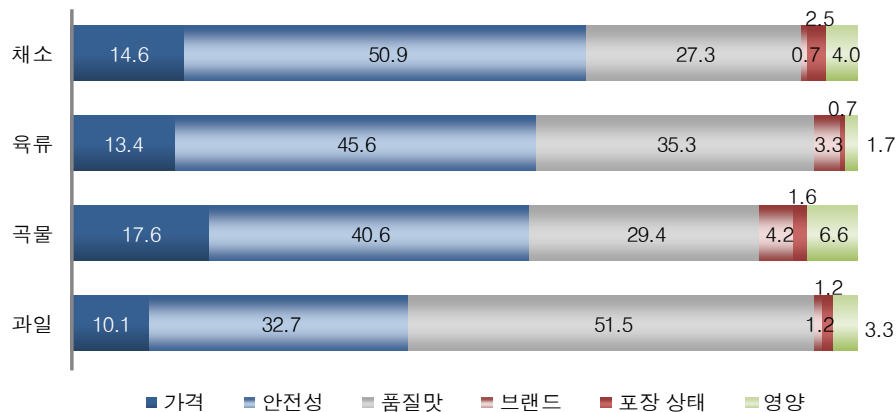
-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도시민, 농업인, 전문가 모두 ‘농가 소득안정’(각 31.6%, 54.2%, 28.6%)과 ‘후계농업인 육성’(각 19.9%, 13.4%, 28.6%)을 꼽았음
- 도시민은 최근 가장 관심이 많은 농업정책 분야로 ‘안전한 식품 공급’(23.1%),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15.7%), ‘농가소득 안정’(12.1%), ‘농산물 가격’(12.0%), ‘농촌복지와 지역개발’(11.8%), ‘FTA 등 국제협상’(10.2%) 순으로 응답
- 정부의 농업예산 우선 지원 분야로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6점 만점에 4.3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농업의 경쟁력 강화’(4.27점), ‘농산물 유통 개선’(3.73점), ‘식량자급률 향상’(3.50점) 등의 순으로 제시

4.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

□ 도시민 60%선 국산 ‘한우’와 ‘쌀’ 국제경쟁력 높다고 인식

- 가격과 안전성 및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산농축산물이 수입산과 비교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 한우(63.5%), 쌀(59.3%), 과일(53.3%), 돼지고기(50.7%), 화훼(40.1%) 순으로 국제경쟁력이 ‘높다’(매우 포함)고 응답

그림 10. 농축산물 구매시 중요한 선택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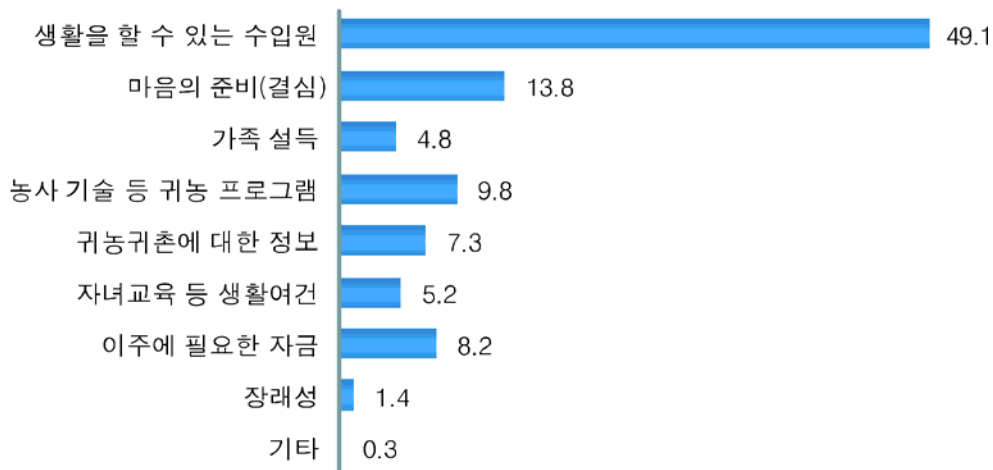


- 농축산물 구입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채소·육류·곡물은 ‘안전성’(각 50.9%, 45.6%, 40.6%)을, 과일은 ‘품질(맛)’(51.5%)이라고 응답
- 농산물시장 확대 개방시 농산물 구입 방식에 대해 도시민들은 ‘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라는 의견이 39.1%로 나타남
 -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안전성 포함) 우수성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이라는 응답이 38.2%로 전년 대비(26.7%) 11.5%p 증가

□ 도시민 귀농·귀촌 의향 63.7%, ‘생활비 보장’이 관건

-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되면 농촌에서 살고 싶다는 의향을 가진 도시민은 63.7%로 전년 대비(47.7%) 16.0%p 증가
-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생활하고 싶은 이유는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61.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17.4%) 순으로 응답
- 귀농·귀촌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응답이 (59.4%) 많아 아직 막연하게 생각하는 도시민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10년 이후’(23.5%), ‘10년 내’(8.7%) 등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기를 고려하고 있는 도시민은 이중 3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남
- 귀농·귀촌시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원’이 49.1%로 가장 많았으며, ‘마음의 준비(결심)’(13.8%), ‘농사 기술 등 귀농 프로그램’(9.8%), ‘이주에 필요한 자금’(8.2%) 등의 순으로 응답

그림 11. 도시민이 느끼는 귀농·귀촌에 필요한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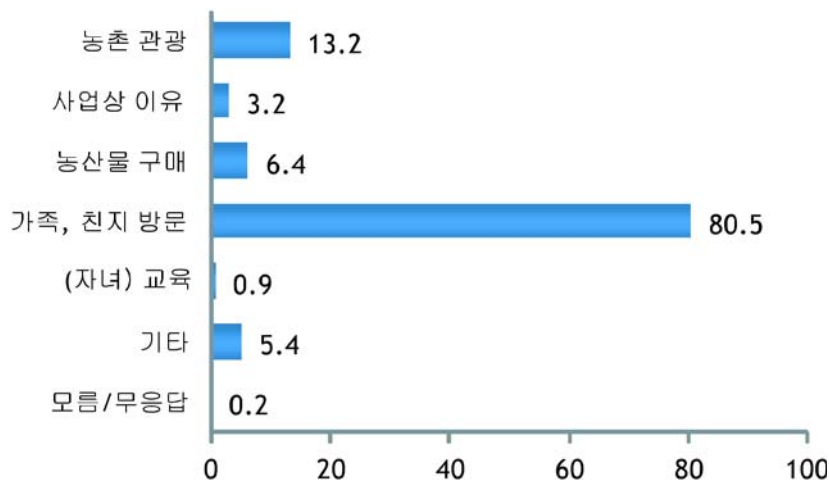


- 농촌 거주 의향을 가진 도시민들에게 정부와 지자체, 귀농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귀농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여부를 알아본 결과,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58.7%로 조사됨

□ 올해 도시민의 농촌방문 횟수는 평균 6회, 체류일수는 8일

- 올 한해(2011년) 농촌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도시민은 61.0%로 조사되었으며, ‘농촌 방문 경험 있다’는 도시민(n=915)의 농촌 방문횟수는 2회가 22.5%로 가장 많았고, 10회 이상도 19.6%였음
 - 농촌 방문 경험 있는 도시민의 평균 농촌 방문횟수는 5.6회, 평균 농촌 체류일수가 7.9일로 조사됨
- 도시민이 농촌을 방문한 목적은 ‘가족·친지 방문’이 80.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농촌 관광’(13.2%), ‘농산물 구매’(6.4%)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12. 도시민의 농촌지역 방문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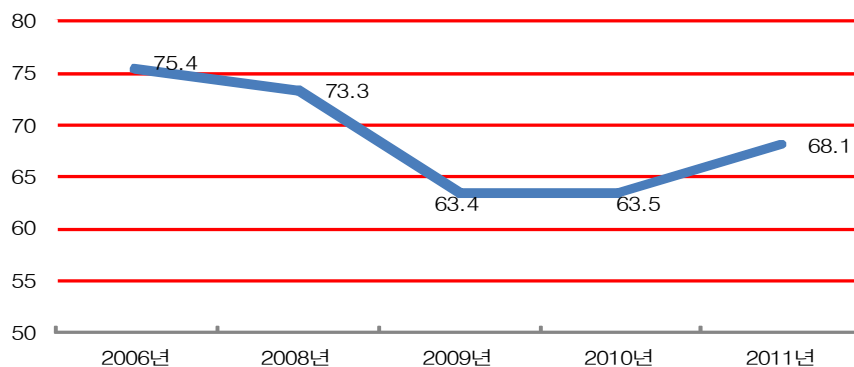


5. 주거환경과 복지대책에 대한 의견

□ 도시민 68.1% “농촌 복지예산 증액 찬성” 전년 比 4.6%p 증가

- 현 거주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도시민의 경우에 전년 대비 (55.4%) 12.4%p 감소한 43.0%인 반면, 농업인은 2006년(25.45%)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 39.5%로 나타나 상승세를 유지
 - 현 거주지에 대한 도시민과 농업인의 만족도 격차는 2006년 13.8%p에서 2011년 3.5%p까지 격차가 좁혀짐
- 도시민에게 농촌지역 환경과 복지 등 전반적인 농촌주민 삶의 질 문제가 자신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밀접하다’(매우 포함)는 응답이 38.3%로 ‘관계 없다’(전혀 포함)는 응답(19.3%)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나 관련성을 높게 인식
- 농촌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복지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적극 포함)하는 도시민이 68.1%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63.5%) 4.6%p 증가
 - 농촌복지 예산 증액에 찬성하는 도시민은 40대 이상과 대학 이상(70.8%)의 고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13. 도시민의 농촌복지 예산 증액에 대한 찬성율 변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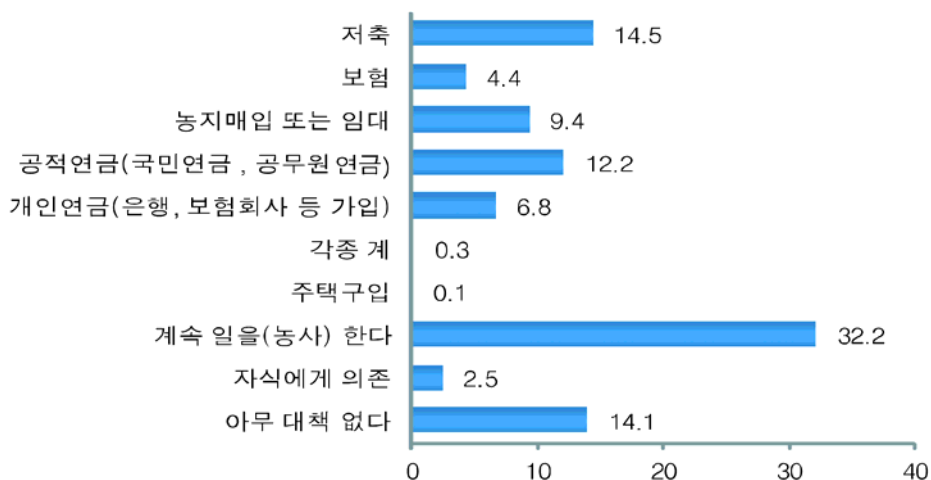
□ 농업인, 다문화가족 지원 ‘충분’ 20.7% 그쳐

- 농업인을 대상으로 마을에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58.9%가 ‘있다’고 응답
- 마을에 다문화가족이 있다는 응답자(n=444)를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 수를 물어본 결과, 1호가 28.6%로 가장 많았고, 2호(26.8%), 3호(15.1%) 등의 순으로 조사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다문화 가족들의 정착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농업인은 20.7%로 나타난 반면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26.0%로 나타남

□ 농업인 57% “노후대책 충분치 않다”

- 농업인들은 노후 대책 준비방법으로 ‘계속 일을(농사) 한다’가 3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저축’(14.5%),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12.2%) 등의 순으로 응답
 - ‘아무 대책없다’는 응답도 14.1%에 달함
- 노후대책에 대해 농업인은 57.0%, 도시민은 53.1%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해 농업인의 노후 준비가 도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14. 농업인의 노후대책 준비방법



6. 시사점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홍보 및 정책개발 필요

-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은 우리나라 농업·농촌 문제가 국가경제에서 중요하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였으며, 농업·농촌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도 농업인과 전문가는 물론이고 70%가 넘는 도시민이 동의하였음
- 10년 후 한국농업의 전망이 희망적이라는 응답이 전문가의 경우 13.6%p 포인트까지 하락하였고, 도시민 과반수 이상과 농업인 10명 중 4명꼴로 우리 농업을 ‘쇠퇴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우리 농업이 성장산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홍보도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우리 농업·농촌의 현재와 미래 역할 인식은 식량공급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꼽았으나, 현재보다 미래에 더 중요해질 역할로 ‘관광 및 휴식장소’, ‘전원 생활의 공간’을 꼽고 있어 이 분야의 수요 증가에 대비한 농촌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도시민들의 가치 인식은 2008년 이후 3년째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향은 반대로 3년째 상승하다 이번 조사에서 하락세로 반전하였음. 따라서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미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안 증가, 국내농업 경쟁력 강화와 피해보상 등 적극적 대책 요구

- 2002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온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는 지난해 34.0%에서 올해 27.5%로 하락했는데, 불만족 원인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등 장래불안’을 꼽은 비율이 전년보다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농업개방에 따른 대책이 적절하다는 농업인은 17.9%에 그치고 있음. 따라

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국내농업 피해보상 대책 마련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불안감 해소 대책이 요구됨

-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라는 정책으로도 도시민과 농업인 전문가 모두 ‘FTA 등 농업개방 대응’을 최우선으로 꼽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복지정책에 대해서도 관심 증가

- 농가의 경영위협 요인으로 농업인들은 최근 3년째 ‘생산비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3.6%p가 증가한 32.2%로 나타나 경영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은 전년보다 16.0%p 증가해 10명 중 6명 정도가 관심을 보였으나, 실제로 5년 내에 실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도시민은 8.7%에 그쳤음. 귀농·귀촌에 가장 필요한 조건은 생활비 보장을 꼽은 가운데, 귀농·귀촌 의향을 가진 도시민 절반 이상이 지원 정책을 모른다고 응답해 정책홍보의 필요성이 강조됨
- 도시민들은 농촌주민 삶의 질이 자신과 관계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복지예산 증액에도 68%가 찬성하고 있음. 이런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번 조사에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노후대책 문제에도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함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2011년

- 제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 제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 (최세균)
- 제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 (한석호, 승준호)
- 제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 (이용선, 서대석)

KREI 농정포커스 제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1. 12. 26

발 행 2011. 12. 27

발 행 인 이동필

편집위원 김정호, 김병률, 김창길, 박시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